

 <b>보건복지부</b>	<b>보 도 참 고 자 료</b>			
배 포 일	2020. 5. 18. / (총 11매)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	팀 장 담 당 자	홍 승 령 김 영 은	전 화	044-202-3575 044-202-3805
중대본 총리실 상황실 기획총괄팀	과 장 담 당 자	노 혜 원 이 승 훈	전 화	044-200-2293 044-200-2295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과 장 담 당 자	나 기 호 황 현 주	전 화	044-201-3823 044-201-3786
중앙방역대책본부 환자접촉자관리단	팀 장 담 당 자	곽 진 순 김 성 순	전 화	043-719-9100 043-719-9101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코로나19 확진자 중 재양성자 관리 방안, ▲KTX 이용 해외입국자 수송정보 지원 방안, ▲지자체별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현황 및 계획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중 재양성자 관리 방안 변경 안내, ▲KTX 해외입국자 수송정보 지원 방안, ▲지자체별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현황 및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박능후 1차장은 앞으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거리 두기를 자연스럽게 실천하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킨다면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공동체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며,

○ 당분간 밀폐되고 밀집한 다중이용시설 방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하게 방문하실 때는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생활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1 코로나19 확진자 중 재양성자 관리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재양성 확인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5월 15일 0시 기준 447명)에 따라 4월 14일부터 확진환자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해왔으나, 재양성 사례에 대한 역학조사 및 실험실적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재양성자 관리 방안을 변경하여 안내하기로 하였다.
- 재양성자 접촉자를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재양성 시기에 접촉한 것만으로 신규 감염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재양성자 호흡기 검체에 대한 바이러스 배양검사 결과 모두 음성을 확인하였다.
- 이것은 현재까지의 재양성자 및 접촉자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 역학조사 및 바이러스학적 검사 결과 재양성자가 감염력이 있다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월 19일 0시부터 현재 시행하고 있는 확진 환자의 격리 해제 후 관리 및 확진환자에 준하는 재양성자 관리 방안 적용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
- 재양성자 관리 방안을 변경해 시행하면서 격리해제 후 관리 중인 자, 기존 격리자도 소급 적용하고, 직장, 학교 등에 격리 해제 후 복귀 시 PCR 검사 음성 확인을 요구하지 않도록 당부하였다.
- 방역 당국은 ‘재양성자’ 용어는 ‘격리 해제 후 PCR 재검출’로 변경하고, 재양성자 발생 시 보고 및 사례조사와 접촉자에 대한 조사 등은 현행대로 유지해 나갈 예정이다.

## 2 KTX 이용 해외입국자 수송정보 지원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월 20일부터 KTX를 이용하는 해외 입국자가 집결하는 광명역에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세부 수송정보를 파악하여 지자체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 정부는 지난 3월 22일부터 해외입국자가 인천공항에서 지역까지 이동하는 동안 감염병 전파 우려가 없도록 교통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 해외입국자에 대해서는 승용차 귀가를 적극 유도하되, 승용차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용 공항버스와 KTX(전용칸)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 장거리 이동은 전용 셔틀버스로 광명역까지 이동한 후 KTX(전용칸, 1일 45회)로 거점 역까지 이동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거점에서 보건소·자택 등 최종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고 있다.
- 'KTX 이용 해외입국자 수송정보 지원 방안'은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해외 입국 지역 주민에 대한 안내, 수송정보 파악 등을 위해 인천공항과 광명역에 파견 중인 지방자치단체의 피로도가 증가하고 각 지역별 업무 수행에 따른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대책이다.
  - \* 인천공항(8): 서울,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전남, 전북, 진주 / 광명역(4) : 광주, 경남, 충북, 전남
  - 정부는 광명역에 해외입국자 종합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전담 인력이 입국자별 세부 정보(이름, 연락처, 자차 이동 여부, 하차역, 최종 목적지 등)를 파악하고, 이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 다만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KTX를 이용할 수 없어 별도 전세버스 등 수송 수단이 필요하여 기존 체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 종합정보센터에는 상시적으로 6명의 전담인력(총 12명, 2교대)이 상주하여 지원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며, 1일 평균 600여 명이 종합정보센터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동안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광명역에서 별도로 해외 입국자 수송 정보를 파악하던 것을 중앙정부가 일괄 조사하여 각 지역에 제공함에 따라, 해외입국자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수송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도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 “앞으로도 해외입국자 이동지원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3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현황 및 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방자치단체별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현황과 계획을 점검하였다.
- 5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하면서,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5월 3일 발표)을 지속적으로 홍보·보완하고, 운영을 중단한 공공시설도 단계적으로 개장하였다.
-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추진 방침에 따라 지자체 특성에 맞게 지침을 수립·시행하고 공공시설 운영 재개, 생활 속 거리 두기 홍보 및 소통을 추진하였다.

- 5월 17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종교시설 5,447개소, ▲노래방 520개소 등 총 25,503개 시설을 점검하여 마스크 미착용, 이용자 명부 작성 미흡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128건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 광주광역시와 강원도는 종교시설 268개소를 점검하여 단체식사,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 5건에 대해 행정지도를 하였으며, 충청북도는 노래방 129개소를 점검해 이용자 명부 작성 미흡 등에 대해 36건의 행정지도를 하였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중앙 합동 점검 결과 유흥시설 21개소, PC방 8개소, 노래방 9개소 등 66개 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 사례를 발견해 마스크 착용 중점 홍보의 필요성이 커졌다.
  - 클럽,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경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합동으로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어제는 6,908개 유흥시설을 점검해 5,661개가 영업 중지 중임을 확인하였고, 영업 중인 업소에 발열체크 미실시 4건 등 현장지도를 실시하였다.
- 부산광역시는 시 실정에 맞게 생활 속 거리 두기 시설별 세부 지침에 산업단지, 대학교, 기숙사 등을 추가해 수립(5.4)하여 시설별로 안내와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 공공시설도 실외 분산시설부터 개방(4.23)하기 시작해, 공원시설 (5.7)을 개방하였으며, 실내체육시설(5.6), 전시·관람시설(5.6), 도서관(5.12)도 시설별 여건을 감안해 부분 개방하였다.
  - \* 실외체육시설 280개, 미술관 8개, 박물관 32개, 공원시설 1,014개 등
- 또한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5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1달간 부산시 소속 공무원(시, 구·군)과 산하 공공기관에 유연 근무제(시차출퇴근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 대구광역시는 중대본의 생활 속 거리 두기 정책을 기본으로 하여, 대구 상황에 맞게 **한층 강화된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
  - ▲증상이 있으면 빨리 검사 받기, ▲집회, 모임, 회식 자제하기 수칙을 추가해 대구시 7대 기본생활수칙을 확정하고, 64개 시설별 세부 생활수칙을 마련하였다.
  - 시민단체, 종교계 등 각계 인사 204명으로 ‘코로나19 극복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참여형 방역체제**를 구축하였으며, 매월 넷째 수요일을 “코로나19 극복 방역의 날”로 지정해 모든 기관과 시민단체 등이 방역 캠페인을 전개하도록 하였다.
  - 또한 **자발적 마스크 쓰기 의식 전환**을 위해 5월 26일까지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마스크 쓰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하였다.
- 경상북도는 5월 6일부터 매주 금요일을 **방역·대청소의 날**로 지정해 각 단체가 **자발적으로 환경을 소독**하도록 하고, 도민의 자발적 방역수칙 실천을 강조하는 “**안심경북-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 캠페인을 진행한다.
  - 유흥시설, 노래방, PC방 등 **고위험업소**는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있으며, 특히 **포항시**는 유흥시설 584개소를 대상으로 민간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5개 방역 컨설팅팀을 7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음식점체에 **안심 접시**를 보급하고, **음식업 종사자 복장**을 개선하는 캠페인도 안동시의 도청 신도시와 하회마을 등 음식점 230개소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4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회의에서 자가격리자 현황 및 관리 방안을 점검하였다.
- 5월 17일 18시 기준 2,788명이 신규 자가격리 대상자로 등록되고 3,392명이 해제되어 현재 자가격리자는 총 35,707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30,312명이다.
  - 어제 국내발생 신규 자가격리자는 251명이며, 이 중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과 관련해 경기 156명, 대구 21명, 서울 14명 등이 신규 자가격리자로 등록되었다.
- 어제(5월 17일)는 무단이탈자가 없었으며, 2월 19일부터 현재까지 총 408건(내국인 341명, 외국인 67명)의 무단이탈 사례가 있었다.
  - \* 무단이탈 적발경로: 신고 129명(32%), 방문 확인 104명(25%), 앱 확인 102명(25%) 등
  - 지금까지 안심밴드 착용한 사람은 총 47명이며, 이 중 28명은 자가격리가 해제되어 현재 19명이 안심밴드를 착용하고 있다.
- 이와 함께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가 생활하며 자가격리를 하거나 진단검사 결과를 기다릴 수 있도록 17개 시도에 101개소(2,816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725명이 입소해 격리 중이다.

< 붙임 > 1. 감염병 보도준칙

2. 코로나19 심각 단계 행동수칙

< 홍보자료 별첨 > 1. 코로나19 예방수칙

2.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
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4. 자가격리 환자 생활수칙
5. 확진 환자 격리해제 시 생활수칙
6. <일반 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7. <확진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8. <격리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9. 마스크 착용법
10.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 붙임1

##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감염병 보도준칙

####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 기본 원칙

#####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사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의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땀 대재앙”

##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 별첨

###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6.]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7.]

###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 붙임2

## 코로나19 심각 단계 행동수칙

### [일반국민]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 [고위험군] :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 [유증상자]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